

# 쉬운해고, 임금 삭감, 비정규직 확대 "노동개혁" 중단하라

관련 기사 4, 5, 6, 7, 12면



알렉스 칼리니코스  
계속되는  
세계경제 위기와  
위협받는 대중의 삶

3면

우석균 칼럼  
의료의  
질도 떨어뜨리는  
임금피크제

4면

격동의 세계 다시 분출한 그리스 총파업 3면  
아르헨티나 대선과 혁명적 좌파의 도전 10~11면  
버마에 민주주의가 올 것인가 11면  
강대국의 각축장이 된 시리아 9면

통합 정의당 출범과  
민주노총 총선 방침

9면

사회변혁적  
노동조합운동의  
강점과 약점

8면



## 누구의 딸일까요?

“물론이다.”

독일 총리 메르켈, 시리아 난민을 차별 대우하겠다는 내무장관을 여전히 신임하나는 질문에 대해.

“40%”

미국 정치적 사실 검증 웹사이트 '폴리티팩트'가 밝힌 공화당 대선 경선후보 트럼프의 전체 발언 중 거짓 비중.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자기 혼이 '비정상'임을 자인한 꼴.

“전국이 강남만큼 수준이 높으면 선거가 필요 없다”

새누리당 김무성, 너도 필요 없다.

“노동개혁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힘을 모아 완수해야 될 시대적 과제”  
박근혜, '노동개혁' 저자가 힘을 모아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인 이유

“헬조선은 자긍심 부족 탓. 개발도상국에 가서 한 달만 지나보면 금방 깨닫는 게 국민적 자부심”  
재산이 58억 원인 오세훈에게 이곳은 천국일 듯

“공무원으로서 종북세력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말해보라.”  
“대한민국에서 추방당해야 하는 사람이 누군지 말해보라.”  
행정고시 최종 면접에 나온 질문들.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든 친일인명사전은 그 본질이 친일마녀사전”  
“친일 청산만큼 친일 연좌제도 퇴출돼야 한다!”  
친일파 후손들이 지도부인 새누리당의 하태경

“국민이 잘못했다니까 잘못된 거지 뭐. 그냥 같이 술 한잔 맛있게 먹은 기억밖에 없다.”  
기자 성추행 혐의로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에서 사퇴한 최몽룡의 희한한 사과

## wspaper.org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의 '일자리 종합대책' 어떻게 볼 것인가

★ 박근혜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 인터넷에서 비판 목소리를 배제하려는 비민주적 언론 통제

★ 연재: 스웨덴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 스웨덴 모델 — 살쾨바덴 협약과 계급타협 전략(1)

★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최영준 공동운영위원장 재판 방청기와 모두 진술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운동의 정당성을 당당히 옹호하다

★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김승주 활동가 재판 방청기와 최후 진술 집시법의 고무줄 잣대를 폭로하다

★ 세종호텔은 정규직 축소와 외주화 시도 중단하라

★ 현대차 이경훈 집행부의 집단폭행 사건 형식적 징계 “시늬”을 승인한 민주노총 중집 유감

★ 서평 <마르크스와 세계경제>, 정성진 지음, 책갈피

## 통계청 조사로도 드러나다

# 시간제 일자리는 누구도 원치 않는 저질 일자리

이현주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2015년 8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는 6백27만 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만 4천 명이 증가했다. 특히 시간제 일자리의 증가가 비정규직 증가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일자리는 지난해보다 10.1퍼센트 증가해, 2백 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2백23만 6천 명). 10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시간제 노동자가 전체 임금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6퍼센트로 나타났다. 2005년에는 7퍼센트 정도였다.

시간제 일자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크게 늘었다.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퍼센트’를 달성하겠다고며 시간제를 늘려 왔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만 시간제 노동자가 40만 명가량 늘었다. 심지어 최근 공공기관인 서울대 병원은 영상의학과와 업무에도 시간제를 도입하려다 반발에 부딪혔다.

정부는 전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촉진하고 동시에 낮은 여성의 고용률을 끌어 올리려 시간제 일자리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질 좋은 시간제 일자리” 운운하며 마치 시간제 일자리가 여성을 위한 일자리인 양 포장했다.

그러나 이번 통계청 발표는 이런 정부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보여 준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시간제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70만 5천 원이다. 시간제 노동자의 70퍼센트는 여성인데, 여성의 평균임금은 더 낮다(66만 6천 원). 평균 근무시간은 1년 7개월로 매우 짧다.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20시간 정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노동시간 평균은 이보다 훨씬 길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시간제 노동자들은 실제 계약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한다. 가령,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전담사로 일하고 있는 강선자 씨는 “일을 준비하려면 더 일찍 나오



실업의 고통과 불안에 짓눌리는 청년들이 단기 저질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 취업을 한 청년 4명 중 1명은 시간제이고, 15~24세 청년 중 저임금을 받는 비율은 50.5퍼센트에 이른다. 국가가 책임지고 양질의 공공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든지 더 늦게까지 남아 일을 해야 한다” 하고 말한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시간에는 초과수당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시간제 노동자들은 짧은 시간 동안 강도 높은 노동을 하도록 내몰린다.

홈플러스의 ‘0.5시간 계약제’는 악명이 높았다. 사측은 실제 일한 시간이 8시간이 넘는데도 7시간 30분 계약(7.5)을 강요했다. 6.5시간, 5.5시간 계약도 있었다. 홈플러스노조는 투쟁을 통해 ‘0.5시간 계약제’를 폐지시켰다. 그런데 사측은 ‘0.5’만 떼어내고 신규채용자에게는 여전히 5시간, 6시간, 7시간짜리 일자리를 강요하고 있다.

시간제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10퍼센트대로, 비정규직 평균과 비교해도 절반 이상 낮다. 퇴직금, 상여금, 시간의 수당, 유급휴가를 받는 비율도 턱없이 낮다. 받더라도 일한 시간에 비례해 토막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런데 정부나 기업주들은 이조차 거추장스럽게 여겨 초단기 계약,

쪼개기 계약 등을 강요해 왔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한 노동자는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초단시간 계약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주당 15시간을 채우지 못하게 하려고 하루 출근시간을 10분 늦추거나 퇴근시간을 10분 당기는 방법으로 주당 노동시간을 14시간 50분으로 맞추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학교 현장의 초단시간 노동자 수는 박근혜 정부 들어 폭발적으로 늘었다.

최근 일부에서는 위탁 채용이 늘면서 시간제 노동자들의 처지가 더 열악해졌다.

시간제 초등돌봄전담사 강선자 씨는 8시간 전일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면 이렇게 말했다. “경기가 어렵고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여성] 아이를 키우고 사회로 나왔을 때 갈 수 있

는 자리가 비정규직밖에 없다. 그중에서도 시간제 일자리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밖에 없는데 선택의 여지가 어디 있겠나.”

시간제 일자리는 강요된 선택이다. 이번 통계청 조사는 정부가 양산한 시간제 일자리가 누구도 원치 않는 저질 일자리일 뿐임을 보여 준다.

그러나 시간제 일자리 문제는 일부 비정규직 부문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칼끝은 정규직을 겨냥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간제 일자리가 대거 도입된 공무원·교사 부문을 보면, 시간제 일자리가 정규직 일자리를 쪼개는 효과를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간제와 파견제 일자리가 대폭 확대된 독일의 경험에서 보듯, 두터운 저임금층의 형성이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하향을 압박하는 효과를 낸다는 점도 봐야 한다. 민주노총이 저임금 노동자들과 정규직 노동자 모두의 이익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저지하는 데 힘써야 하는 이유다.

## 현대중공업 노조 백형록 후보 당선

# 노동자들이 연이어 민주파 지도부를 선택하다

10월 28일 현대중공업 노조 선거에서 민주파를 대표한 백형록 선본이 무려 61퍼센트가량을 득표해 당선했다. 이는 2013년 민주파 정병모 선본이 얻은 득표율(약 52퍼센트)보다 늘어난 것이다. 선거 기간에 백형록 선본은 고용 안정 쟁취, 비정규직과의 연대 강화, 노조 조직력 강화 등을 주장했다.

“친사측” 진영이었던 서필우 선본은 ‘파업 피로증’ 따위를 떠들었지만, 약 34퍼센트를 득표하는데 그쳤다. 사측은 선거 기간에 온갖 방해 공작을 했지만 민주파에 대한 노동자들의 지지를 꺾을 수 없었다.

2013년에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민주파 집행부를 선출했다. 노동자들은 18년 만에 부분 파업을 벌였고, 사

내하청 노동자들과 다른 조선소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등 투쟁을 발전시켰다. 이런 투쟁이 더 발전하기를 위한 노동자들이 다시금 민주파인 백형록 선본을 지지했다.

세계경제와 조선업의 위기가 계속되자 정부와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대우조선 노조에 ‘무파업과 임금 동결’을 골자로 한 동의서를 강요했다. 현대중공업 사측도 임금 동결과 대규모 전환 배치를 노동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당선 후 <노동자 연대> 기자와 만난 백형록 당선자는 이렇게 말했다.

“노동자들은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경영자들이 마음대로 잘못된 경영을 해 놓고 노동자들에게 책임지라

는 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조직화를 자신의 문제로 보고 핵심 사업으로 삼아야 합니다. 올해 하청노조 가입 운동은 잘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조직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정말이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은 조선소 노동자 투쟁에서 필수적이다. 전체 조선업에서 비정규직의 수가 정규직의 세균절일 정도로 조선업의 비정규직 비중은 매우 크다.

백형록 당선자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맞선 연대 투쟁도 강조했다.

“지금은 전체 노동운동 진영이 정부와 사측의 총체적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연대 투쟁이 원

활하게 될 수 있는 구조를 모색할 때입니다. 다가오는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을 위해서 대공장 노조나 금속노조, 민주노총 동지들과 만나서 제대로 된 전국 노동자 연대투쟁을 만들고 싶습니다. 민주노총과 함께 파업해야 합니다.”

나아가 백형록 당선자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가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와 사측은 노동자들을 계속 공격할 것이다. 이를 막아내고 노동자들의 조건을 개선하려면, 백형록 당선자가 말한 투쟁 과제들을 일관되게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그 속에서 현장 활동가들이 투쟁의 전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김지태



## 그리스 총파업 현장 소식

노동자들의 투지가 낳은  
대규모 저항

시리자가 이끄는 그리스 좌파 정부가 유럽 연합과 합의한 긴축에 반대해 총파업이 벌어졌다.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의 지도적 당원이자 그리스 〈노동자 연대〉의 편집자인 파노스 가르가나스가 현지에서 그 소식과 분위기를 전한다.

오늘[11월 12일(목)] 총파업은 모든 이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규모 파업이었다. 단 한 대의 선박도, 기차도, 비행기도 운행되지 못했다. 아테네에서는 지하철이 하루 종일 운행되지 않았고, 버스도 아침과 저녁에는 운행을 멈췄다.

은행 사무직 노동자들처럼, 2011년 이래 한 번도 대열을 지어 집회에 참가한 적이 없던 노동자들도 이번 파업 집회에 참가했다. 2012년 [선출된 정치인이 아니라 국제 채권단이 인정한 금융권 출신 '전문가'가 이끈] 전문관료 정부가 무너진 이래 가장 큰 파업 집회였다.

본대회에 앞서 공산당은 사전 행진을 조직했는데 그 대열의 길이는 1킬로미터에 달했다. 고고학 박물관에서 출발해 본대회로 합류한 다른 행진 대열의 길이도 그만큼 길었다. 반자본주의 좌파연합 안타르시아는 그 행진에서 아주 두드러졌다.

의회 앞에서 열린 본대회 규모는 거대했다. 7월 국민투표 때 '오χιOXI'[구제금융 반대] 집회(당시 좌파 총리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연사였다)보다도 컸거나, 적어도 그에 견줄 만큼 컸다.

이것이 보여 주는 바는 분명하다. 사람들이 선거에서는 치프라스가 이끄는 시리자를 찍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치프라스 정부가 하는 행동을 다 받아들

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치프라스가 선거에서는 이겼을지라도 사람들이 긴축에 반대해서 행동에 나서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

파업을 지지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서 심지어 시리자조차 파업 전날, 파업 지지 입장을 내놓아야 했다. 시리자는 이를 이렇게 합리화했다: 파업에 더 많이 참가할수록 정부가 '트로이카' 채권단과 협상하는 데 힘이 더 많이 실린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주요 쟁점에서 트로이카에 굴복했다. 이미 정부는 연금을 삭감하고 있고, 더 많은 긴축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의회는 정년을 67세로 올리도록 표결했다. 기존에 연금을 받던 사람들에게도 소급 적용해서 연금을 삭감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조차 연금 개약안의 '꼬리'에 불과하고 '몸통'은 아직 국회로 넘어가지도 않았다. 파업 전날 유출된 정부 문건을 보면, 정부는 앞으로 연금 지급액을 퇴직 직전 임금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산정해 연금을 삭감하려 한다.

## 협박

노동조합들은 이 연금 개약안이 의회에 상정될 때 파업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국제 채권단 '트로이카'는 그리스 은행들에 대한 구제금융을 지원했던 것을 무기 삼아 이번 달이나 늦어도 다음 달까지 연금 개약안을 통과시키라고 그리스 정부를 협박하고 있다.

해운, 지방정부, 병원 등의 부문에서도 많은 쟁의가 일어나고 있고 장차 파업이 더 많이 벌어질 것 같다.

군사정권에 맞서 1973년 [11월 중순] 아테네 공과대학에서 시작된 항쟁[군사정권 몰락의 서막이었다]을 기념하는 시위도 올해 아주 크게 일어날 듯하다. 교육 예산 부족과 교사 등 인력 부족에 교사와 학생 모두 분노하고 있어서, 그들이 대거 나올 것 같다.

우파는 난민 위기를 기회 삼아 시리자를 공격하려 했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정부는 좌파적 압력을 더 받고 있다.

무엇이 대안이냐를 두고서 곳곳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우파 정부가 긴축을 집행할 때는 정부를 좌파로 갈아치우면 긴축을 끝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좌파 정부가 긴축을 추진하는 지금] 그런 기대를 하기 어렵고, 그래서 일각에는 사람들이 실의에 빠져 있고 파업이 실패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태 전개를 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편, 공산당이나 시리자에서 이탈한 민중연합은 "진정한" 좌파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또 다른 좌파 정부를 세우려면 가야 할 길이 아주 멀다. 선거 득표 면에서 두 정당은 한참 작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파업에 나서고 시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자들이 자력으로 행동할 때, 정부로 하여금 입장을 번복하고 긴축을 중단하게끔 만들 힘이 노동자들에게 있음을 사람들도 알 수 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479호

번역 김종환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위기 속에 사람 목숨  
희생시키는 자본주의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다. [ ] 안의 말은 역사나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첨언한 것이다.

세계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대서양의 동쪽과 서쪽 중 어디 사느냐에 따라 세계경제 전망이 상당히 다른 듯하다.

11월 첫째 주 영란은행(영국 중앙은행) 총재 마크 카니는 2017년까지 0.5퍼센트 수준의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가 내세운 주된 이유는 중국과 브라질 등 '신흥시장' 경제의 둔화였다.

지난 9월 영란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앤디 홀데인은 한발 더 나아가 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최근 사건들은 '경제 위기 3부작'이라 불린 만한 위기 중 3부에 해당합니다. 1부는 2008~09년의 '앵글로 색슨발' 위기였고 2부는 2011~12년의 '유로 지역' 위기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3부에 접어들었는데, 3부는 2015년부터 시작된 '신흥시장' 경제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대서양 건너편 미국에서는 중앙은행 구실을 하는 연방준비제도가 12월쯤 금리를 인상하려 한다. 11월 6일 미국 노동통계국은 10월에 늘어난 일자리가 27만 1천 개라고 발표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달 미국에서 일자리가 급증했다"며 흥분해서 열변을 토했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미국 경제가 이제 완전고용 수준에 근접했으므로 금리를 올려 경기 과열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호들갑은 과장이다. 지난 3개월 동안 미국에서 늘어난 일자리는 월 평균 18만 7천 개인데, 이 수치는 2014년 월 평균인 26만 개에 한참 못 미친다. 2015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고작 1.5퍼센트에 그쳤고, 최근 발표된 여러 보고서는 제조업 전망을 어렵게 예측했다.

게다가 10월 미국의 고용률[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62.4퍼센트로, 1970년대 후반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많은 사람들이 구직을 단념한 것이다.

경제학자 앤 케이스와 앵거스 디턴은 이와 관련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들은 미국에서 대학 학위가 없는 비(非)히스패닉계 백인 중년층의 사망률이 1999~2013년 급증했음을 발견했다. 낮은 고용률과 높은 사망률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노동자들이 우울하고 무력감을 느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 변수

2008~09년 대불황 이후 경기 회복이 지지부진하자 로런스 서머스와 폴 크루그먼을 비롯한 미국의 상당수 경제학자들은 영국의 홀데인과 마찬가지로 금리가 너무 낮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주요 변수는 중국이다. 2008~09년 위기 이후 중국 경제는 급성장하면서, 중국에 원료와 식량을 공급하는 '신흥시장' 경제를 부양하는 구실을 했다. 중국 경제의 급성장은 대출과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늘린 덕분에 가능했다. 그 결과 생산설비도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빠르게 늘었다.

중국 경제는 이제 투자가 줄고 성장도 둔화하고 있다. 10월에는 수출과 수입이 모두 하락했다. 철광석과 석탄의 수입량은 각각 12.3퍼센트와 21.4퍼센트 하락했다.

그러자 중국에 철광석을 수출해 온 브라질 등 다른 나라에서 연쇄 효과가 나타났다. 나는 몇 주 전 브라질의 미나스제라이스 주를 방문했는데 그 지역은 광산 개발 때문에 그야말로 난도질당한 상태였다. 11월 초 [철광석 광산 댐이 붕괴해] 진흙과 광산 폐기물이 벤투 호드리게스라는 작은 마을을 덮쳐 이수라장이 됐고 수십 명이 실종됐다.

이 참사는 세계적 자본축적 과정이 얼마나 다양하고도 무자비하게 보통 사람들을 희생시키는지를 일깨워 준다. 그러나 금융시장은 이런 사건을 레이더망에 등장하자마자 사라지는 잡음 정도로만 치부할 것이다. 금융시장은 온통 중국의 경기 둔화로 철과 다른 원료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느냐에 관심을 두고 있다. 중국의 경기 둔화와 원료 가격 하락은 벤투 호드리게스 참사의 주범 [오스트레일리아계 광산업체] BHP 빌리턴과 [브라질 철광석 생산업체] 발레 등 다국적기업의 이윤을 압박한다.

핵심적 문제는 금리가 너무 높거나 낮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본주의 경제가 이윤을 쫓는 방식으로만 작동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는 이윤율이 너무 낮아서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현실 때문에 세계경제가 여전히 위기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벤투 호드리게스 참사와 미국의 사망률 지표는 자본주의가 이윤을 위해 보통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체제임을 다시 한 번 보여 준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479호

번역 이승민



사진 출처 그리스 〈노동자 연대〉

2015년 11월 12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총파업 집회.



#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임금피크제 반대 투쟁은 노동자 권리와 환자 안전을 위한 투쟁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건강과대안 부대표

지난 10월 서울대병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온라인 직원투표를 강행했다. 그러나 전체 6천45명의 직원 중 3천1백77명(52.5퍼센트)만이 투표에 참여했고, 그 중 1천7백28명이 찬성했다. 28퍼센트 정도에 해당하는 숫자다.

근로기준법대로 하면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동자의 집단 동의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서울대병원에서는 노동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으므로 도입될 수 없다. 그런데도 서울대병원은 10월 29일 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의결했다.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서울대병원 설치법대로라면 이사장은 서울대총장이 맡고, 병원장과 기재부·교육부·복지부 차관이 당연직으로 이사에 포함된다. 이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차관 3명에 병원장까지 고위 관료들이 백주대낮에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만일 경찰이 노동자들을 대하는 방식으로 했다면, 이사회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의하려는 순간 “여러분은 불법행위를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고지한 후 곧바로 다 잡아갔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이 병원장을 고발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서울대병원만이 아니다. 경북대병원에서도 직원들의 개별동의를 받았으나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를 가결시켰다.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에서는 아예 동의 절차도 없이 서



메르스 환자 1백86명 중 35퍼센트가 환자 가족이었다는 사실은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 환자의 안전과 직결됨을 보여 준다.

면 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가결시켰다. 지금 전국의 국립대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 근로기준법

임금피크제는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약의 내용 중 하나다. 정부는 노동개약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은 노동자들의 해고를 쉽게 하는 일반해고제를 도입하고, 취업규칙 변경을 쉽게 하여 성과급제도를 도입하려 한다. 이 전조전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이다.

국립대병원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박근혜 정부가 노동관련법을 개악하기 전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를

미리 현실화하려는 것이다. 법 개정작업이 되기도 전에 불법적인 ‘행정독재’를 통해 노동개약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이다. 그것도 근로기준법을 어기면서까지 말이다.

박근혜 정부가 국립대병원에 도입하려는 노동개약은 환자 안전에도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친다. 다른 나라들에 견줘 한국의 병원들은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예를 들어 간호 인력은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다. 일본은 간호사 1명 당 환자 수가 7명이고 미국도 간호사 1명 당 환자 수가 5명이다. 그런데 한국은 간호사 1명당 환자 수가 15~20명이다. 지금도 한국의 환자들은 안전하지 않다. 메르스 사태 때 1백86명의 환자들 중 35퍼센트가 환자 가족들이었다는

부끄러운 숫자는 병원의 인력 부족 탓에 가족들이 간병을 할 수밖에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간호사 1명이 환자 1명을 더 보게 되면 사망률이 1천 명 당 15명 늘어난다는 보고도 있다. 이미 한국에서는 알게 모르게, 살릴 수도 있는 환자들이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이 죽어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더 쉬운 해고, 비정규직 도입, 임금피크제, 성과급제를 도입한다고? 얼마나 환자들을 더 죽이겠다는 것인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약은 노동현장에서 고용 불안정과 인력 감축을 부를 것이다. 공공서비스 부문의 노동개약은 이용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 병원에서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따라서 현재 세종시에서 농성을 벌이고, 병원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투쟁일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안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다.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이 자신의 몸을 불사르며 외친 구호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였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이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어기면서 국립대병원에 임금피크제와 노동개약을 강요하고 있다. 45년이 지난 지금 병원 노동자들은 전태일의 그 구호를 다시 외치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 코앞에 닥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 공격

이정원

정부가 연내에 ‘노동개혁’을 완료하겠다고 하며 추진을 서두르는 가운데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 중심 임금 체계와 저성과자 퇴출제 공격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0월 말 정부는 교사·공무원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리고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의 일환이기도 한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방안을 11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일반해고 요건 완화 가이드라인 발표에 앞서 공공부문부터 공격을 시작해 이를 굳혀 나가려는 것이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구체적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는 2010년 시행된 간부직 대상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수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권고안의 골자는 직급별 호봉·연봉 테이블을 폐지하고, 평가를



2015년 10월 15일 1만 2천여 명이 모인 노동개약 저지 공공노동자 집회.

통해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정하고, 직무평가에 따라 직무급을 설치하는 것이다. 기본연봉은 누적식이라 임금격차가 점차 커지고, 고성과자와 저성과자 간 연봉의 차이는 20~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정해져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 권고안을 더 확대·강화해 성과제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적용 대상을 7년 이상 전 직원 또는 일정 직급(3급) 이상으로 대폭 넓히고, 기본연봉의 인상을 차등폭도 공무원 수준인 4퍼센트로 확대(현행 2퍼센트)하며, 성과연봉도 최고와 최저 등급 간 격차(현행 2배)를 더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은 임금, 승진을 두고 더한층의 성과 경쟁에 시달려야 한다.

정부는 연봉 인상액은 총인건비 안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어 임금 총액은 결코 늘리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결국 일부 고성과자에게 저성과자의 임금을 빼앗아 줌으로써 노동자들 간에 분열을 조장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성과연봉제와 직무급제) 도입을 통해 중장년 노동자들의 임금 억제·삭감을 노리고 있다. 이미 성과연봉제가 도입된 KT에서는 불과 몇 년 안에 다수 노동자들의 임금이 동결 혹은 삭감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게다가 저성과자 퇴출제까지 도입되면 노동자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공공기관 취업규칙에서 사실상 사문화돼 있던 직권면직 조항을 되살리고 구체화해 저성과자 퇴출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성과평가 강화와 저성과자 퇴출제는 관리자들의 통제력을 강화해 노동자들의 조직력과 단결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노동조합

자체가 무력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분명 과장이지만, 노조 활동이 상당히 위축될 수는 있다.

한편, 정부는 노동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성과연봉제나 저성과자 퇴출제를 노동자 일부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고, 이를 점차 확대하려 할 수 있다. 당장이 공격이 조합원 전체에게 해당하지 않을지라도 일단 제도가 도입되면 확대는 훨씬 수월할 수 있다. 따라서 애초에 도입 자체를 막기 위해 힘을 기울여야 한다.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가 끔찍한 공격인 만큼 노동자들의 위기 의식과 반감도 매우 크다. 비록 임금피크제 전선은 밀렸지만, 노동자들이 더 심각하다고 여기는 공격이 시작되는 상황이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신속하게 시작해 나가야 한다.

공공운수노조는 ‘노동개혁’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에 적극 참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먼저 본격화되는 공격에도 맞서 나가야 한다.



## 대우조선노조 지도부의 협력 동의서

## 임금 동결·파업 자제로는 고용을 보장할 수 없다

## 박설

올해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업 빅3가 수조 원 대의 영업손실을 입은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앞으로 2~3년간 조선업 빅3에서 1만여 명의 인력 감축이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물론 정부가 수익성 낮은 조선업체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마음 먹은 것은 아니다. 10월 29일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4조 2천억 원을 지원한 데서 보듯, 정부는 수만 명을 고용한 국가기간산업 도산이 낄을 정치적·경제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해당 기업에 필요한 자금은 지원하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른바 ‘조선업 살리기 구조조정’으로 불리는 이번 정책이 뜻하는 바는 간명하다. 기업의 수익성 회복을 위해 노동자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전가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대우조선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10월 23일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자금 지원 계획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임금·노동조건·쟁의를 포기하겠다는 노조의 항복문서를 가져오라는 것이었다. 그러지 않으면 정부 지원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노조 동의서가 없으면 회사는 부도다.’ 경제부총리, 금융당국, 보수 언론을 등에 업은 사측은 경영설명회를 열어 노동자들에게 파렴치한 협박을 이어 갔다.

## 노조 동의서

산업은행은 결국 노조 동의서를 받아 낸 뒤에야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인력 감축, 부장급 3백명 권고사직, 임금파크제 강화, 국내외 자회사 매각, 외주화 등의 계획도 포함됐다.

그러나 왜 위기를 만든 장본인인 정부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임금·노동조건을 양보해야 하는가. 대우조선은 지난 십수 년간 졸권 산업은행이 최대 주주였고, 금융위원회, 국민연금까지 합치면 정부가 50퍼센트 가까이 지분을 가진 정부 소유 기업이다. 대우조선이 저유가로 손실이 커진 해양플랜트 사업에 뛰어든 것도, 골칫덩이 해외 자회사(대우 망갈리아)를 떠안게 된 것도, 분식회계 등 부실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정부 책임이다.

안타깝게도 대우조선노조 집행부는 정부의 압박에 무기력하게 굴복했다. 노조 동의서에는 ‘임금 동결, 파업 자제,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력’ 등이 담겨 있다고 알려졌다.

현시한 위원장은 이것이 “조합원들을 지켜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협박한 부도사태를 막아 “인위적 해고”는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조 동의서는 조합원들의 임금도, 노동조건도, 고용도 지키지 못했다. 당장은 수수 물량 때문에 현 인력이 필요하지만, 해양플랜트 인도가 마무리되는 내년 이후에는 정규직·사내하청 인력을 줄이겠다는 게 산업은행의 발표다. 그 규모가 3천여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노조 집행부는 이것이 정년퇴직에 따른 자연 감원일 뿐이라지만, 설사 그렇다 쳐도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는 심각할 수 있다. 게다가 이미 과장급 이상 3백 명이 ‘희망퇴직’이란 이름으로 쫓겨났고, 그 칼날이 현장 노동자들에게로 향할 수도 있다.

조선업의 장기불황 속에서 앞으로 대우조선의 수익성이 회복되리란 보장도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가 파업이란 무기를 내려놓으면 결코 고용을 지킬 수 없게 된다. 2010년에 금호타이어지회 집행부도 ‘해고만은 막아야 한다’며 굴욕적 동의서에 서명했지만, 그 결과는 1천여 명이 넘는 인력 감축, 살



수만 명의 일자리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해 정부 재정을 투입하라는 것은 완전히 정당한 요구다 2015년 7월 14일 파업 집회.

인적인 노동강도, 40퍼센트가량의 임금 삭감, 각종 복지 축소 등 끔찍했다.

노조가 이런 고통을 수용하며 기업 회생에 매달리면, 거둬 양보와 후퇴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현시한 집행부는 사측과 함께 ‘회사 살리기’를 위한 전사원 토론회를 준비 중인데, 활동가들은 이것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초질서 지키기’, 현장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일자리 보장을 위한 정부 지원

그럼에도 적잖은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이 계속되고 부도 위협까지 있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금이 나오면 좀 낫지 않겠냐’고 여겼던 듯도 하다. 이 같은 생각이 자라난 것은 노조가 사측의 공격에 제대로 맞서지 못해 투쟁의 대안이 희미해지고 냉소와 사기저하가

커져 왔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대우조선은 1999년 대우그룹 부도 이후 2001년 워크아웃에서 졸업했지만, 지금까지 십수 년째 매각 문제가 떠올랐다. 매각 시도는 번번히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때마다 노동자들이 느낀 고용불안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에 책임지고 일자리를 보장하라고 분명히 요구하지 않은 채 ‘경영 정상화’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들의 고용은 언급도 없이, ‘왜 부실 기업에 혈세를 또 지원하느냐’는 참여연대 식 접근도 위험하다.

이는 원·하청 노동자 5만여 명과 협력업체 노동자들, 그 가족의 생존이 달린 문제다. 따라서 정부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세금을 투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문제는 공적자금이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데 있다. 공적자금은 구조조정, 인건비 동결 등을 수반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대우조선 노동자들도 고통을 당해 왔다. 따라서 정부 지원은 반드시 일자리를 지키는 데 써야 한다고 요구해야 한다.

지금껏 봤지만, 대우조선 같은 대형 기업을 인수해 고용을 보장할 주체는 정부 말고는 사실상 없다. 몇 해 전에 인수 의사를 밝혔던 한화 같은 재벌에 매각됐더라도, 이윤에 눈먼 이들이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했을 리는 만무하다.

국가 소유가 진보를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정부는 위기에 빠진 기업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책임지라고 요구할 가장 적절한 대상이다. ‘일자리 보장을 위한 국유화’ 요구가 필요한 이유다.

## 11·29 국제 기후 행진

## 더는 온실가스 규제를 지배자들에게 맡겨 둘 수 없다

## 김중환

올해 11월 30일부터 프랑스 파리에 서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가 열린다. 이 총회는 해마다 열리지만 올해는 좀 더 특별하다.

6년 전 지배자들은 새롭고 더 엄격한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었다. 1990년대에 만들어진 목표(교토 의정서)가 곧 만료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바마와 당시 중국 지도자 원자바오 등은 사실상 아무런 온실가스 규제도 만들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2015년에 다시 논의하자고 했다. 당시 지배자

들의 결정은 온건한 환경단체들조차 규탄할 만큼 황당한 것이었다.

지배자들의 거짓 놀음에 또다시 농락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노동조합과 단체들이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총회 개최 전날인 11월 29일에 프랑스 파리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시위를 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총회가 마무리될 12월 12일에는 각국의 활동가들이 회담장 밖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그들은 온실가스 문제를 지배자들에게 맡겨 둘 수 없고 기후변화가 아니라 체제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노동운동이 기후변화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각국 정

부들이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거부하는 이유로 일자리 문제를 내세우기 때문이다. 노동운동이 일자리 문제와 환경문제를 모두 해결할 급진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단결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예컨대, 정부가 화석연료 개발 사업, 핵발전소와 화력발전소, 자동차 도로 확장에 쏟는 막대한 돈을 재생 가능 에너지와 철도·지하철 등 대중교통에 투자하면 오히려 일자리를 만들면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이윤과 경쟁에 눈먼 지배자들에게 맡겨서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혁명가들은 노동자와 평범한 사람들의 투쟁을 자본주의와 그 지배자들에 맞선 투쟁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오염자들의 회의 기후변화는 자본주의 체제의 지배자들이 이윤 경쟁 때문에 인류 전체를 재앙에 빠뜨리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노동개악안 16일 환노위 상정, 20일 법안심사소위 시작

## 경계! 11월 23일부터는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수 있다

김하영

정부와 새누리당은 연내 ‘노동개혁’ 강행을 부르짖고 있다. 올 한해 동안 박근혜는 세월호 시행령, 공무원연금 개악,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관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마무리하기 위한 길을 닦아 왔다.

안타깝게도 노동운동은 이런 공격들을 좌절시키지 못했다. 이제 ‘노동개혁’ 5대법안 처리가 눈앞으로 다가와,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여당의 노동개악안은 11월 16일 국회 환노위에 상정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그리고 20일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기 시작한다. 법안심사소위가 열린면 계류된 순서대로 법안을 심사하게 된다. 논란이 있는 법안의 심사가 뒤로 미뤄진다 해도 그 다음주(23~27일)에는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5대법안 심사가 이뤄질 공간이 크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지금 민주노총이 제시하고 있는 12월 3~9일 총파업 일정은 뒤늦을 수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3일)과 정기국회 종료(12월 9일) 사이가 가장 급박한 시기”라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이 일정대로 가면 민주노총의 총파업 기본 방침인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상정 시”를 그대로 넘길 위험이 작지 않다.

일각에서는 새정치연합이 법안심사소위 상정 일정을 지연시키거나 심지어 통과를 막아 주기를 바라는 듯하다. 하지만 국회 바깥 노동자 투쟁의 거대한 압력 없이 새정치연합이 이렇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다. 무엇보다, 새정치연합은 법안심사소위 상정을 막는다는 입장이 아니다. 그들은 법안 논의 자체를 막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새정치연합이 자신들의 노동개혁안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봐도 법안심사소위 논의에 들어가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개악을 멈출 파업을 단호하게 조직해야 한다.

예산안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보더라도 새정치연합이 법안심사소위 상정을 12월 초로 지연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개정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국회 본회의에 정부 예산안이 자동 귀속의 효력(12월 9일) 사이가 가장 급박한 시기”라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이 일정대로 가면 민주노총의 총파업 기본 방침인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상정 시”를 그대로 넘길 위험이 작지 않다.

일각에서는 새정치연합이 법안심사

### 총선 전일지라도 주의해야 할 새정치연합의 본성

만약 12월 초 전에 노동개혁안이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는데도, 준비 부족을 이유로 12월 초 총파업 계획을 유지하면서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지켜보면, 새정치연합의 배신에 뒤통수를 맞을 위험이 커진다.

새정치연합은 ‘노동개혁’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정규직 양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비정규직

보호를 명분으로 얼마든지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에 타협할 수 있다. 비정규직 개악안만 문제라는 듯이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상보험법을 우선 논의하면서 우리 측에 환란을 초래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결국 비정규직 개악안마저 적당히 타협할 수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노동개혁’ 반대 운동 진영 내에서 ‘어차피 저지할 수 있느냐’, ‘새정치연합안이 차악이지만 그것을 반대하면 대안이 있느냐’, ‘비정규·미조직을 위해 정규직이 양보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온갖 편향된 논리가 고개를 들며 운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

###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실질적 효과도 나아 한다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 조정되고 있는 국회 일정만 바라보면 무엇 하나 분명한 것 없이 그저 ‘준비’라는 이름을 이유로 12월 초 총파업 계획을 유지하면서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지켜보면, 새정치연합의 배신에 뒤통수를 맞을 위험이 커진다.

새정치연합은 ‘노동개혁’의 필요성 자

체를 부정하지

않고 정규직 양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비정규직 보호를 명분으로 얼마든지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에 타협할 수 있다. 비정규직 개악안만 문제라는 듯이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상보험법을 우선 논의하면서 우리 측에 환란을 초래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결국 비정규직 개악안마저 적당히 타협할 수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노동개혁’ 반대 운동 진영 내에서 ‘어차피 저지할 수 있느냐’, ‘새정치연합안이 차악이지만 그것을 반대하면 대안이 있느냐’, ‘비정규·미조직을 위해 정규직이 양보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온갖 편향된 논리가 고개를 들며 운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

###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실질적 효과도 나아 한다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 조정되고 있는 국회 일정만 바라보면 무엇 하나 분명한 것 없이 그저 ‘준비’라는 이름을 이유로 11월을 보낼 수 있다. 그러면 노동하면서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지켜보면, 새정치연합의 배신에 뒤통수를 맞을 위험이 커진다.

새정치연합은 ‘노동개혁’의 필요성 자

체를 부정하지 않고 정규직 양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비정규직 보호를 명분으로 얼마든지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에 타협할 수 있다. 비정규직 개악안만 문제라는 듯이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상보험법을 우선 논의하면서 우리 측에 환란을 초래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결국 비정규직 개악안마저 적당히 타협할 수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노동개혁’ 반대 운동 진영 내에서 ‘어차피 저지할 수 있느냐’, ‘새정치연합안이 차악이지만 그것을 반대하면 대안이 있느냐’, ‘비정규·미조직을 위해 정규직이 양보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온갖 편향된 논리가 고개를 들며 운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노동개혁’ 반대 운동 진영 내에서 ‘어차피 저지할 수 있느냐’, ‘새정치연합안이 차악이지만 그것을 반대하면 대안이 있느냐’, ‘비정규·미조직을 위해 정규직이 양보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온갖 편향된 논리가 고개를 들며 운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노동개혁’ 반대 운동 진영 내에서 ‘어차피 저지할 수 있느냐’, ‘새정치연합안이 차악이지만 그것을 반대하면 대안이 있느냐’, ‘비정규·미조직을 위해 정규직이 양보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온갖 편향된 논리가 고개를 들며 운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노동개혁’ 반대 운동 진영 내에서 ‘어차피 저지할 수 있느냐’, ‘새정치연합안이 차악이지만 그것을 반대하면 대안이 있느냐’, ‘비정규·미조직을 위해 정규직이 양보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온갖 편향된 논리가 고개를 들며 운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

###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실질적 효과도 나아 한다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 조정되고 있는 국회 일정만 바라보면 무엇 하나 분명한 것 없이 그저 ‘준비’라는 이름을 이유로 11월을 보낼 수 있다. 그러면 노동하면서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지켜보면, 새정치연합의 배신에 뒤통수를 맞을 위험이 커진다.

새정치연합은 ‘노동개혁’의 필요성 자

체를 부정하지 않고 정규직 양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비정규직

보호를 명분으로 얼마든지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에 타협할 수 있다. 비정규직 개악안만 문제라는 듯이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상보험법을 우선 논의하면서 우리 측에 환란을 초래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결국 비정규직 개악안마저 적당히 타협할 수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노동개혁’ 반대 운동 진영 내에서 ‘어차피 저지할 수 있느냐’, ‘새정치연합안이 차악이지만 그것을 반대하면 대안이 있느냐’, ‘비정규·미조직을 위해 정규직이 양보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온갖 편향된 논리가 고개를 들며 운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

### 총선 전일지라도 주의해야 할 새정치연합의 본성

만약 12월 초 전에 노동개혁안이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는데도, 준비 부족을 이유로 12월 초 총파업 계획을 유지하면서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지켜보면, 새정치연합의 배신에 뒤통수를 맞을 위험이 커진다.

새정치연합은 ‘노동개혁’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정규직 양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비정규직 보호를 명분으로 얼마든지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에 타협할 수 있다. 비정규직 개악안만 문제라는 듯이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상보험법을 우선 논의하면서 우리 측에 환란을 초래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결국 비정규직 개악안마저 적당히 타협할 수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노동개혁’ 반대 운동 진영 내에서 ‘어차피 저지할 수 있느냐’, ‘새정치연합안이 차악이지만 그것을 반대하면 대안이 있느냐’, ‘비정규·미조직을 위해 정규직이 양보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온갖 편향된 논리가 고개를 들며 운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노동개혁’ 반대 운동 진영 내에서 ‘어차피 저지할 수 있느냐’, ‘새정치연합안이 차악이지만 그것을 반대하면 대안이 있느냐’, ‘비정규·미조직을 위해 정규직이 양보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온갖 편향된 논리가 고개를 들며 운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

민주노총의 “국회 대응”

## 노동계급 고유의 방식으로 국회 밖에서 싸워야 한다

김문성

박근혜는 11월 10일 자신의 각종 개악 정책들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 “흔이 비정상”이라며 히스테리를 부렸다.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은 12일, “노동개혁이 법안을 가로막는 것은 국정을 방해하는 비애국적 행위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적대 행위”라는 막말을 했다.

이런 지지를 하라 속에서도 국회의 “노동개혁” 처리 절차를 앞두고 여권과 우익의 투지를 독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매우 신경질적인 막말로 표현되는 것은 최근 경제 위기가 악화되면서 지배계급 안에서 불안감이 번지는 것과 관계 있는 듯하다.

현재 새누리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법안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자동 상정됐다. 이 법안들은 11월 16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시작되는 20일 이후 안전 상정돼 다뤄질 예정이 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상정시 무기한 파업’이라는 파업 계획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회 대응계획도 발표했다. 10월 30일에는 민주노총 지도부가 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노동개혁” 반대 당론 채택과 환노위 상정 자지를 요구했다. “노동개혁” 저지를 위한 야권공조를 요구한 것이다. 물론 정의당도 야권 공조의 대상이다.

박근혜가 필사적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상황에서 국회(야권 공조)를 통한 ‘정치적’ 중재 노력보다는 민주노총의 파업 투쟁이 더 효과적인 반격일 것이다.

대중 파업은 “노동개혁”이 지켜지고 하는 바로 그 기업주들의 이윤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 국회 표결에 대비해 “국회 대응”도 필요하지만, 그런 국회 압박의 동력으로서 국회 바깥에서 효과적인 대중 투쟁을 조직해야 하는 것이다.

## 교원평가제도 개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맞서 전교조가 연가 투쟁을 한다

주순진 전교조 조합원

박근혜 정부가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는 것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만이 아니다. 정부는 교원만 노동유연화 공격한 교원평가제도 개악도 추진하고 있다.

교원평가제도는 크게 세 가지다.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성과급, 근무평정(근평).

그동안 교원평가는 법적 근거가 없었고, 전교조 교사들은 중심으로 꽤 많은 교사들이 교원평가를 거부하며 저항해 왔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교원평가를 혼령으로 만들어 법적 강제력을 높이겠다고 한다. 평가 거부 교사를 징계하고, 평가 결과를 온라인에 공개해 교사 및 학교 간 경쟁을 강화하려 한다.

그리고 성과급과 근무평정(근평)을 통합하겠다고 한다. 성과급은 임금과

## 국회 절차에 대응하는 수준으로는 부족하다

첫째, 박근혜 정부는 국회 개악 입법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입법 절차를 우회한 개악도 추진하고 있다. 가령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취업규칙 개악 등은 아예 행정지침으로 처리하려 한다. ‘시행령 통치’ 스타일을 “노동개혁”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이미 현장에서는 “노동개혁”의 내용을 관찰시키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이미 임금피크제 등을 상당히 관철했고, 내진감에 성과차등연봉제의 연내 관철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서울 대병원 사측은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직원 투표를 강행했다가 부결되자, 이사회 결의로 통과시켜 버렸다. 이런 일이 경북대 등 나머지 국립대병원에서도 재연되고 있다.

##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중요하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개악을 저지하려면 민주노총이 실질적인 파업 투쟁 조직에 무게중심을 뒀야 한다. 불필요한 후퇴나 양보 없고 이윤에 타격을 가하는 단호한 대중투쟁만이 박근혜의 공세에 맞서는 힘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럴 때 새정치연합도 무시 못할 압박을 느낄 것이다.

민주노총 중앙과 산별 지도부는 ‘상정시 파업’ 계획을 제출했었다. 그런데 막상 총궐기 다음주에 법안들이 상정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투쟁 지침은 ‘상정시’에서 ‘처리시’로 슬쩍

이런 상황에서 국회 대응과 야권 공조에 우선순위를 두면 당연히 공격에 맞서는 투쟁의 타이밍을 놓칠 우려가 있다. 이는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 동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둘째, 박근혜 정부는 어떤 회생을 치러서라도 “노동개혁”을 연내에 관철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런 강박은 경제 위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불안감이 번지는 것과 관계 있는 듯하다.

게다가 새정치연합은 노동법 개악에 반대한다고 말은 하지만, 일관되지가 않다. 통상임금, 노동시간 단축

시 임금과 노동조건 유지 등에서도 매우 의심스러운 입장이다. 민주노총 지도부와 간담회를 할 때 새정치연합 소속 환노위 의원들은 ‘당론은 당 지도부와 상의하겠다’, ‘상임위 상정은 못 막으니, 논의 시 민주노총과 충분히 사전 논의하겠다’ 정도로만 답했다. 그 뒤 보름이 지났지만 환노위 일정 공조 이상 더 나아진 문제는 없는 듯하다.

‘민생’

새정치연합도 새누리에 비하면 조력자 구실이지만 자본가 계급에 기반을 둔 친자본주의 정당이기 때문인데, 이를 잘 아는 박근혜와 여권은 ‘민생’을 내세워 그들을 압박하는 것이 다. ‘민생’이란 말은 기업주들의 민원

을 해결해 주는 일을 뜻하는 코드명 구실을 해 왔다. 아니나 다를까, 11월 8일 새정치연합은 교과서 국정화 반대 농성을 정리하며 ‘민생최우선주의’를 내세웠다.)

따라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동개혁” 법안들을 다루기 전에 노동운동이 외부에서 강력한 압박을 가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과 정권의 밀어붙이기에 새정치연합이 점점 저항하다가 멈추고, 점점 버티다가 끝러가는 익숙한 모양새가 될 확률이 매우 크다.

민주노총이 파업 동력보다 일부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활약에 기대려 하던 할수록, 오히려 새정치연합을 매개로 새누리당의 책략에 발목 잡힐 수도 있다.

노조 사무실 폐쇄 공격을 막은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 그러나 지부장 징계 등 노동조합 탄압에 맞선 투쟁은 계속된다

박찬석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장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는 사무실 사수를 위한 철야 농성 14일째(11월 9일) 긴급 대의원 간담회를 열어 구경에 빠졌었던 현판을 되찾아 오고, 조합원들과 함께 농성을 마무리했다. 마포구지부는 정부의 노조 사무실 폐쇄 시도에 맞서 당당하게 저항해 승리한 것이다.

마포구지부가 사무실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지부 조합원들이 사무실 사수 투쟁의 정당성에 지지를 보내 줬기 때문이다. 마포구청 측은 사무실 사수를 위해 연대하러 왔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출입을 봉쇄했지만 지부 조합원이 물레 문을 열어 줬다. 일부 조합원들은 사무실 폐쇄를 위해 강제 동원되는 것



투쟁으로 당당하게 현판을 되찾은 마포구지부.

을 거부하기도 했다. 조합원들은 정부의 노조 사무실 폐쇄 시도가 퇴출제와 성과주의 강화를 위한 사전 작업임을 이해하고 있었다.

한편, 폭넓은 연대로 큰 힘이였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부지구협은 ‘차별없

는 서울 대행진’ 일정을 하루 전날 긴급 변경해 마포구지부 사무실 사수 투쟁에 함께했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는 전 지부가 하루 한 번 농성조에 참가하는 지침을 내려 투쟁에 힘을 보탰다. 전국에서 이 투쟁의 승리를 바라는 공무원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는 폐지 1순위 교육제도로 뽑힌 바 있다.

11월 7일 열린 전교조 임시 대의원대회는 11월 20일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철폐 및 교육노동 파단 저지를 위한 전교조 연가 투쟁”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8월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했던 “활동가 연가 투쟁”을 “전교조 연가 투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전교조 지도부가 연가 투쟁 조직 대상을

“희망 조합원”으로 한정하는 방침을 병렬적으로 제시한 것은 아쉬웠지만 말이다.

이 대의원대회의 결정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대한 분노와 함께 교원평가제도 개악에 대한 교사들의 불안이 크다라는 점을 보여 줬다. 전교조 활동가들은 기층에서 11월 20일 연가 투쟁 조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는 박근혜의 ‘노동개혁’을 저지하는 투쟁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 사회변혁적 노동조합운동(신디컬리즘)의 강점과 약점

20세기 초 혁명을 위해 전념한 사회변혁적 노동조합들이 크게 성장했다. 랠프 달링턴이 신디컬리즘 노조들은 무엇을 표방했고 한계는 무엇이었는지를 검토했다. 랠프 달링턴은 영국 쉘퍼드대학교 고용관계학 교수로 여러 노동조합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고, 《사회변혁적 노동조합 운동》(책갈피, 2015)의 지은이다.

20세기의 첫 20년 동안 공격적인 파업이 국제적으로 분출하면서 사회변혁적 노동조합들이 여러 나라에서 등장했다. 사회변혁적 노조들은 노동조합 투쟁을 혁명적으로 만들어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려 애썼다.

그들은 관료적 지도자들이 장악한 전통적 노조들에게도 적대적이었다. 그리고 의회 정치를 거부하고 노동자들이 생산 현장에서 발휘하는 힘에 기대고자 했다.

사회변혁적 노동조합 운동(이하 신디컬리즘) 활동가들은 몇몇 기존 노조들이 신디컬리즘 원칙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했다. [기존 노조에서 분리해] 혁명적 노조와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신디컬리즘의 영향을 받은 노조 중 가장 대규모였고 가장 잘 알려진 노조는 프랑스의 노동조합총연맹(CGT)이었다. 이탈리아의 노동조합연합(USI), 스페인의 전국노동조합총연맹(CNT), 아일랜드의 아일랜드운수일반노조(ITGWU)도 신디컬리즘의 영향을 받은 노조들이었다.

이 신디컬리즘 노조들은 제1차세계대전 개전 전까지 여러 해 동안 노동조합 운동에서 다수 경향을 차지했다. 이 나라들 외에서도 신디컬리즘은 노동조합 활동가 중 만만찮은 소수를 결집시켰다. 미국의 세계산업노동자동맹(IWW)이 그랬다. 영국의 신디컬리즘은 제1차세계대전 개전 이전 몇 년 동안 활동한 산업신디컬리스트교육동맹(ISEL)이 대표했다.

국제 신디컬리즘 운동은 급속하게 성장했다.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주류 노동조합들이 [노동자들의] 사회적·정치적 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동자 지식인들”이 신디컬리즘 운동을 이끌었다. 미국의 ‘빅 빌’ 헤이워드와 엘리자베스 걸리 플린, 아일랜드의 짐 라킨, 영국의 톰 만과 JT 머피 등이 그들이었다.

## 혁명

노동자들의 투쟁성이 치솟고 정치적 급진화가 일어나면서 신디컬리스트들이 수많은 청중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조성됐다. 신디컬리스트들은 1911년 리버풀 운수산업 파업, 1913년 더블린 대중파업과 직장폐쇄, 1914년 이탈리아의 ‘붉은 한 주’ 총파업 같은 주요한 파업을 지도했다.

국제 노동조합 운동 내 한 경향으로서 신디컬리즘의 전성기는 20년밖에 지속되지 못했다. 1920년대 초 혁명적 노동자 투쟁이 퇴조하자 신디컬리즘도 쇠퇴했다.



신디컬리즘은 노동계급의 단결된 힘으로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고자 했으나, 이론과 실천 면에서 약점도 있었다. 1911년 영국 리버풀 운수 파업.

[한편] 1917년 러시아 노동자들은 볼셰비키 당에 이끌려 국가 권력을 장악했다. 이는 [신디컬리즘 운동에 대한] 중대한 이데올로기적·정치적 이의 제기였다.

러시아 혁명의 뒤를 이어 혁명적인 공산당들이 창립됐다. 공산당들은 대다수 신디컬리즘 조직들을 빠르게 대체했다.

그래도 신디컬리즘은 그 시대 이곳저곳에서 노동계급 투쟁의 물결이 폭발적으로 분출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신디컬리즘은 노동자들의 전투적 행동과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을 고무했다. 그리고 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위한 방법을 둘러싼 논쟁에서 이데올로기적·정치적으로 두드러진 기여를 했다.

신디컬리즘은 자본주의를 혁명으로 완전히 전복해야만 노동계급이 해방될 수 있다고 본 계급 전쟁의 사상이자 운동이었다. 보통의 노동조합들은 ‘공정한 노동에 대한 공정한 임금’을 표어로 내걸었지만, 신디컬리스트들은 임금 제도 자체도 철폐하고자 했다.

신디컬리스트들은 한사코 자본주의 내에서 개혁을 이루려고만 애쓰지 말고 혁명적 산업 투쟁으로 더 나아가자고 주장했다.

신디컬리스트들은 선거 승리에 매달리는 것을 노동계급의 힘이 가장 약한 전장을 고르는 것으로 보았다. 신디컬리스트들이 보기에 노동계급의 경제적 잠재력은 생산 현장에서 가장 강력했고, 따라서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

신디컬리스트들은 국가는 계급 지배의 도구이며 타도해야 한다고 했던 혁명가 칼 마르크스의 주장에 동의했다.

신디컬리스트들은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의회주의· 기회주의· 배신을 증오했을 뿐더러 더 나아가 정당의 필요

성을 거부했다.

신디컬리스트들은 정치적 쟁점이 노동자들의 단결을 구축할 수 있는 집단적 노동조합 투쟁과 산업 조직에 종속돼야 한다고 봤다. 그리고 개혁주의적 노조들의 부문주의·관료주의·개혁주의·보수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미조직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자기 조합원들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

신디컬리스트들은 계급 전체를 아우르고 혁명적 노선을 따르도록 노조들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떤 나라에서는 노조의 성격과 목표를 바꾸려 애썼다.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개혁주의적 노조에 반대해 혁명적 노조를 창립하는 데 힘을 쏟았다.

신디컬리스트들은 전투적인 산업 투쟁과 직접행동 전술을 심화시키는 것에 노동계급을 해방시킬 잠재력이 있다고 봤다. 그들은 이런 투쟁이 누적돼 나타날 최고 형태의 투쟁이 혁명적 총파업이라고 봤다.

볼셰비키 혁명의 승리는 전 세계 신디컬리스트들을 고무했다. 그들은 볼셰비키 정부의 초청을 받아 러시아에서 열린 코민테른 회의에 참석해 전략과 전술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러시아 혁명가 레온 트로츠키는 신디컬리스트들의 혁명적 잠재력을 알아보았다. 트로츠키는 신디컬리스트들을 가리켜 “부르주아지와 싸우길 원할 뿐 아니라 [개혁주의자들과] 달리 정말로 부르주아지를 타도하길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볼셰비키 지도자들은 신디컬리스트들의 이론과 실천에 상당한 결함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 그래서 날카롭게 논쟁도 했다. 특히, 기존의 개혁주의적 노조를 수구적 지도자들에게 내맡기는 식으로 활동하면 신디컬리스트들이 더 광범한 노동계급 대중

으로부터 고립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 역설

볼셰비키 지도자들은 혁명가들이 자신들의 대의 쪽으로 평조합원들을 설득하려 애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노동자 권력을 세우는 데 전념하는 혁명적 노조를 건설하려 애쓰는 것에 어떤 모순이 있는지를 볼셰비키 지도자들은 명확하게 설명했다.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조합은 필연적으로, 눈앞의 제한된 개선을 이뤄내는 것에 관심을 두게 된다. 이 때문에 노동조합은 개혁주의적 교섭위원이자 노동쟁의 중재자처럼 행동하게 된다.

노동조합 운동은 자본과 노동 사이의 모순을 표현하지만, 해결하는 수단은 아니다. 신디컬리스트들은 노동조합이 혁명적 조직으로서의 구실과 노동조합으로서의 구실을 동시에 하게 하려다 곤란을 겪었다.

볼셰비키는 신디컬리스트들이 정치 쟁점을 산업 투쟁보다 경시하는 것도 비판했다. 볼셰비키는 이것이 개혁주의의 정치/경제 분리를 반대로 뒤집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리하면 개혁주의에 맞선 일관된 정치적 대안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볼셰비키 지도자들은 자본주의 국가를 혁명적으로 타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신디컬리스트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신디컬리스트들은 노동자들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것, 즉 노동자 평의회를 기초로 노동자 국가를 수립하는 일 없이도 총파업만으로도 자본주의 국가를 혁명적으로 타도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자본가들이 반드시 벌일 폭력적인 반격을 격퇴하려면 노동자 국가가 꼭 필요하다.

볼셰비키는 신디컬리스트들이 정당

을 너무 혐오한 나머지 노동계급 조직과 의식의 불균등성을 극복하는 데서도 한계에 부딪히고 만다고 주장했다.

이 약점 탓에 신디컬리스트들은 노동자 투쟁의 수위가 떨어졌을 때도 살아남을 수 있는 영속적인 조직을 구축하는 데서 한계가 있었다.

신디컬리스트들은 ‘혁명적 소수’가 할 수 있는 지도적 구실을 강조했다. 그러나 여기서도 신디컬리스트들의 이론은 불충분해서, ‘전위’적인 혁명적 전투 정당 이론이 되지는 못한다고 볼셰비키는 지적했다.

레닌의 정당은 산업 쟁점과 정치 쟁점을 결합하고, 그것을 노동자들의 당면 투쟁과 결합해 혁명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이루고자 했다.

신디컬리스트들의 대부분은 [볼셰비키의 비판에] 시큰둥했다. 하지만 적잖은 신디컬리스트들은 신디컬리즘 전략과 가차없이 결별하고 신생 공산당들에 가입했다.

신디컬리즘과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전통 사이의 논쟁은 서섹스 대학교의 ‘팝업’ 노조가 보여 주듯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의가 있다. 서섹스 대학교의 일부 노동자들은 올해[2013년] 초에 [전국 노조와 별개인] 독자적 비공인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그들은 기존 노조가 각종 삭감 정책과 민영화에 제대로 맞서 싸우지 않는다고 느끼며 분노했다.

이러한 활동 방식은 노동조합 관료 문제를 회피한다는 점에서 신디컬리즘과 비슷한 문제가 있다. 노조 관료를 피해 노동조합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노동조합 관료를 자유롭게 만들어 줄 뿐이다. 무엇보다 이런 방식의 활동은 기존 노조에 남아 있는 노동자들을 내버리게 돼, 최상의 투사들이 노동자 대중으로부터 동떨어지게 되는 문제를 낳는다. 그리고 기존 노조 안에서 평조합원들을 조직할 가능성도 경시하게 된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71호 / 번역 김동욱

새로 나왔습니다



**사회변혁적 노동조합운동**  
— 20세기 초 유럽과 미국의 신디컬리즘

랄프 달링턴 지음, 이수현 옮김,  
책갈피, 552쪽, 22,000원

20세기 초 신디컬리즘 운동의 경험을 상세히 돌아보는 이 책은 한국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마주치는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통합 정의당 출범을 앞두고

김민식

정의당 · 노동정치연대 · 진보결집+ · 국민모임이 통합한 정의당이 11월 22일 출범할 예정이다. 2012년 통합진보당 분열 이후 사분오열해 ‘각개 기어가기’를 하던 진보 정치 세력들이 처음으로 (대통합이 아니라 부분적 통합 일지라도) 통합한다.

정의당은 노동정치연대 · 진보결집+ · 국민모임을 통해 각각 노동조합 상근간부층, 지역 정치 활동가, 진보 지식인 기반을 보강할 수 있게 됐다.(통합 정당의 성격과 전망에 대해서는 필자가 <노동자 연대> 157호에 쓴 ‘현재 추진 중인 노동자 정치 세력화, 어떻게 볼 것인가?’를 참조하시오.)

당명에서 드러나듯이, 정의당이 통합을 주도했다. 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은 정의당 당명을 한사로 피하고자 했다. 자신들의 행보가 정의당에 ‘수혈’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비칠 것을 우려해서였다.

그래서 당명이 통합 과정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진보정당의 당명은 흔히 그 당의 정치 노선과 지향을 표현하므로 매우 민감한 문제다. 민주노동당 창당과정에서도 당명 제정 문제로 긴장이 날카롭게 고조됐었다. 결국 당명은 정의당으로 낙착됐다.(노동정치연대 · 진보결집+ · 국민모임이 유사 정당 당명을 아예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다소 강경한 자세였던 것 같다.)

## 모순

새누리-새정치, 기존의 자본가 정당들에 맞서 대중적 진보 정당이 등장하는 것은 전진이다. 부르주아 양당 체제에 대한 대중적 불신에 더해, 통합 효과 덕분에 내년 총선에서 통합 정의당이 진보 정치 세력 중 가장 전진할 것 같다.

선거에서 통합 정의당이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 등 노골적인 부르주아 정당과 맞붙는다면 사회주의자들은 이 정당에 투표하라고 대중에게 말해야 할 것이다. 물론 개

혁주의적 환상을 경계하면서 말이다.

통합 정의당은 파업과 시위 같은 국회 밖 대중 투쟁이 결국 국회 등 기성 정치 제도들을 통한 사회 개혁에 종속돼야 한다고 믿는 개혁주의 정당이다. 그래서 피지배자들의 저항과 연대의식을 확산하는 데 어느 정도 일조하지만, 결국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려 한다.

그런 만큼 그 당 안에는 모순이 존재한다. 심상정 · 노회찬 등 주요 리더들은 운동과 정치를 날카롭게 분리시킨다. 반면, 통합 정의당이 “제도 정당”이자 “사회운동적 정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력도 존재한다.

사회주의자들은 통합 정의당의 개혁주의적 전략을 놓고 논쟁을 하면서도, 특정 쟁점을 놓고 통합 정의당 내 좌파와 공동전선을 구축할 줄도 알아야 한다.(혁명가들과 좌파의 정치 전망에 대해서는 필자가 <노동자 연대> 157호에 쓴 ‘현재 추진 중인 노동자 정치 세력화, 어떻게 볼 것인가?’를 참조하시오.)



민중총동맹

## 민주노총의 총선 대응 방침에 대해

최근 민주노총 정치위원회가 총선 대응 방침을 논의하는 중이다. 그중에 ‘선거연합 정당’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당법의 제약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하나의 정당이지만, 그 내부에서는 참여한 정치 세력들의 정치적 독자성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노동자연대’는 진보/좌파 진영의 정치적 단결을 이룰 방안으로 느슨한 ‘연합 정당’ 모델을 전부터 제안해 왔다. 진보/좌파 세력들이 각개약진을 해서는 부르주아 양당 구조 밖에서 진보적 정치 대안을 효과적으로 건설하는 게 만만찮기 때문이다. 그래서 광범한 진보/좌파 세력이, 단체인만이 아니라 개인들도 참여하는 되도록 광범한 연합체를 제안했다.

광범하다는 것은 또한 정치적 이질성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정치적으로 이질적인 세력과 개인들이 단결을 이루려면 조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느슨한 연합체, 즉 전선체

적 조직 모델이 유용하다. 이런 조직 구조는 상이한 경향이 숨쉬고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반대로, 각 구성 성분의 정치적 독립성과 독자적 행동을 완전히 보장하지 않고 상이한 정치 경향들이 상대 경향들에게 자신의 강령과 노선을 따를 것을 강요하면 끊임없이 긴장이 생겨날 것이다.

안타깝게도, 내년 총선 전에 ‘선거연합 정당’이 성사될 가망성은 낮아 보인다. 진보대통합을 주장하는 옛 진보당 세력은 찬성하겠지만, 통합 정의당은 “과거 통합진보당의 주도 세력[과의 통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말) 여전히 남아 있는 통합진보당 분열의 감정적 앙금에 더해, 총선에서 득표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현실적 계산 때문인 듯하다.

이 때문에 통합 정의당은 옛 진보당 세력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기층 조직력보다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몇몇 정치인들을 전면에 포진시키는 공중전에 의지해 총선을 치르려 할 것 같다. 통합 정의당이 비례대표 의석수 문제와 직결돼 있는 선거구 획정 협상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그렇다고 통합 정의당의 지역구 당선 가망이 없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뉴욕처럼 뉴욕시와 몇몇 지역에서는 당선 가능성도 있다.)

노동당은 방금 전에 진보 통합 문제를 놓고 분열했기 때문에, 그리고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는 개혁주의 정치 세력과의 분립에 주력할 것이기 때문에 ‘선거연합 정당’ 방안에 호의적이지 않을 듯하다. 그럼에도 ‘선거연합 정당’은 온건 개혁주의 정당으로부터 좌파들의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광범한 진보성향의 정치적 단결을 이룰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다. 민주노총 정치위에서 ‘선거연합 정당’ 논의가 잘되기를 바란다.



##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

## 시리아를 둘러싼 쟁탈전의 최근 국면

### 사이먼 아사프

러시아군이 개입하면서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비극은 한층 더 처참해졌다. 많은 도시들이 파괴되고, 폭격을 피해 필사적으로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난민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러시아, 터키 그리고 각종 동맹국들이 보낸 전투기가 시리아 하늘을 메웠고, 이제 러시아, 이란, 터키와 미국이 지상군 투입을 시작하고 있다.

이미 무수히 많은 시리아인들이 고국을 떠났다. 거기에 러시아의 공습 때문에 지난 한 달 동안 12만 명이 추가로 피난길에 오르게 됐다.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안전했던 알레포 시 남부의 반군 장악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다. 하지만 정부군이 장악한 지역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

러시아는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시리아에 개입한 것이 아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시리아가 갈갈이 찢겨나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이익을 관철할 지역을 만들고 싶어서 뛰어든 것이다.

### 명분

러시아 크렘린궁 외교정책자문위원회 의장인 표도르 루키아노프는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의 시리아 개입 목적을 이렇게 요약했다. “(러시아는) ‘알라위파[시리아 정권의 핵심부를 이루는 종파]로 이뤄진 이스라엘’을 건설하길 원한다. 즉, [마치 미국-이스라엘 관계처럼] 외부의 지원을 받으며 세속적 가치를 지키는 요새가 돼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라크 · 시리아 이슬람국가’[이하 아이시스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는 빗장 구실을 하길 바란다.]

러시아의 정책은 단순히 알 아사드 정권을 떠받치려는 것이 아니다. 시리아에 서는 지난 1년 동안 반군 세력들이 차지하는 영토가 엄청나게 늘었는데 러시아는 이상황을 역전시키려고 한다. 러시아는 지금 시리아 정권이 통치하는 지역에 많은 군사 기지들을 짓고 있다.

‘아이시스에 맞선 전쟁’은 그저 군사적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일 뿐, 실제 러시아의 공습은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아이시스와는 무관한] 시리아 반군들에게 집중됐다. 특히 [시리아 서북부를 중심으로 올해 3월에 생긴 반정부군 연합체 ‘정복군’의 주력 부대인 자브라 알 누스라는 걸프 국가들의 후원을 받고 있는 이슬람주의 반군 세력을

터키도 아이시스에 맞서 전쟁을 벌인다면 실제로는 아이시스가 아니라 시리아 북부 지역에 준자치 지역을 건설한 쿠르드족을 주되게 겨냥하고 있다.

이런 러시아의 전략에도 불구하고 현지 아사드 정권의 처치는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 아사드의 군대는 너무나 사기가 떨어져 있어 러시아의 군사 지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슬람주의자들이 주도하는 반군이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릴 가능성도 크지 않다. [시리아인 다수를 차지하는 수니파 제외] 알라위파 등 소수집단들을 끌어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 교착 상태

지금 이 전쟁에서 실질적 이득을 얻고 있는 세력은 아이시스밖에 없다. 알레포 지역의 반군들은 북쪽으로는 아이시스에 의해, 남쪽으로는 아사드 정권에 의해 포위당한 채 이제 러시아의 공습 대상까지 됐다.

러시아의 군사 개입 때문에 미국은 앞으로 있을 평화 협상에 이란을 초대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2011년 시리아 혁명의 핵심 요구에서 더 멀어지는 일이다. 시리아 혁명은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의 퇴진을 요구했는데 이란은 아사드 정권의 주요 후원자이기 때문이다.

강대국들의 개입은 시리아 내전을 해결하기는커녕 파비린내 나는 교착 상태만을 만들었을 뿐이다. 시리아 혁명을 시작했던 대중 세력은 기세가 꺾였다. 한때 거대한 시위 물결을 만들며 시리아 거리를 가득 메웠던 사람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전장에 있지만, 혁명은 방향을 못 잡고 있다.

시리아 대중 운동의 기운은 유럽 국경 곳곳에 등장했다. 난민들이 ‘요새 유럽’으로 밀려온 것이다. 그리고 바다에서 생존자들을 구해 내고 난민 캠프를 위해 식량과 의복을 모으는 등 아낌 없는 지원에 나서고 있는 유럽의 보통 사람들이 난민의 우군이 됐다.

데이빗 캐머런은 ‘아이시스 격퇴’를 내세우며 군사적 개입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거부감을 과거 수준으로 줄이려 한다. 그리고 토니 블레어의 이라크 전쟁 패배로 생겨난 “이라크 신드롬”에서 벗어날 기회로 삼으려 한다.

“아이시스의 야만성”에 맞선 전쟁은 단지 미사여구일 뿐이고, 진실은 시리아를 차지하고자 새로운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제국주의 국가들 간에 위험한 충돌 가능성을 낳고 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11월 / 번역 전문기





2014년 8월 28일 총파업에 참가한 아르헨티나노동자연맹(CTA) 소속 노동자들.

사진:로이터/노동자연대(CTA) 소속 노동자들

아르헨티나 대선

# 페론주의의 위기와 양극화 속에서 노동운동과 혁명적 좌파가 성장하다

김준효

11월 22일, 아르헨티나에서는 보통 선거가 시행된 1912년 이후 사상 최초로 대선 결선 투표가 벌어진다.

지난 10월 25일 치른 총선과 대선\*에서 전임 대통령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의 후계자이자 페론주의\* 여당인 정의당(PJ) 후보 다니엘 시올리가 36.9퍼센트를 득표했고, 신자유주의적 우파 후보 마우리시오 마크리가 34.3퍼센트를 득표했다. 같은 날 치른 총선에서도 정의당이 포함된 선거연합 ‘승리를 위한 전선’(FpV)은 하원에서 26석을 상실해 과반수 확보에 실패했다. 수도 인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주(州) 주지사 선거에서도 직선제 실시 이래 최초로 여당이 패배하고 우파가 당선했다.

이 선거로 정의당은 큰 타격을 입었다. 결선 투표를 열흘 앞둔 현재 아르헨티나 내 주요 여론조사 결과들은 야권이 근소한 우세를 점했다고 나타난다.

한편 좌파도 성과를 얻었다. 극좌파 선거연합 ‘좌파와 노동자 전선’(FTT)은 총선과 대선 모두에서 80여만 표(약 3.3퍼센트)를 얻어 4위를 기록했다. FTT는 대선과 겹쳐 사표 심리가 작용하는 가운데서도 지지 기반을 대체로 지켰다.

이런 선거 결과는 21세기 첫 10년 동안 아르헨티나 정계를 지배해 온 페론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신자유주의적 우파들이 득표를 늘려가는데, 극좌파도 상당한 지지를 얻는 아르헨티나의 정치 상황을 잘 이해하려면 지난 번 위기와 저항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 2001년 경제 위기와 자발적 대중 반란

2001년 아르헨티나는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했다. 디폴트는 끔찍한 경제 공황으로 이어져, 세계 최대 규모의 낙농업과 곡물 수출을 자랑하는 나라에서 국민의 80퍼센트가 다음날 끼니를 걱정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직접적 원인은 미국의 IT 거품이 꺼진 여파였다. 아르헨티나 경제는 1990년대 내내 외채가 계속 늘어 1천3백억 달러에 이르렀고 신자유주의적 규제 완화 정책으로 취약해진 상태였다. 그래서 금융 시장의 거품 붕괴가 가한 충격을 견디지 못했다.

정부는 IMF의 권고를 받아들여 긴축을 추진하고 민영화를 추진하려 했다. 이에 분노한 민중이 저항에 나섰다. 2001년 12월 19일 실업자·노동자·중간계급 등 다양한 집단들이 대규모로 참가한 시위는 강경 진압으로 유혈낭자하게 끝났다. 이것은 사람들의 분노를 촉발했다. 대중 반란이 벌어졌다. 운동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해 한 달 동안 대통령을 세 번이나 갈아치웠다.

이 반란에서는 세 종류의 사회 운동이 두드러졌다. 가장 주목받은 것은 전투적 실업자 운동 ‘피케테로스’였다. ‘피케테로스’는 1990년대 초 국영 석유 기업의 민영화에 맞선 노동자 투쟁이 패배한 후 시작됐다. 그리고 2001년 경제 위기 이후 실업률이 급등하면서 순식간에 대규모로 성장했다. 이들은 전국 주요 도로를 봉쇄하고 싸우면서 투쟁의 초점을 제공했고, 운동이 성장하면서 국가가 제공하는 실업급여를 자체적으로 분배했다.

다음으로는 지역 운동에 기반한 ‘주

민위원회’가 있었다. 이 위원회는 지역 사회에서 재화를 물물교환해 당장의 삶을 꾸릴 방편으로 만들어졌는데,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만 1백 개가 넘게 생겨났을 정도로 확산됐다. 운동이 성장하면서 주민위원회는 여러 부문의 투쟁이 만나는 자리 구실을 하게 됐다. 2002년 초 주민위원회 대회(위원회들의 위원회)의 TV 실험 중계가 시청률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주민위원회는 대중적 관심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꿈을 만한 것은 공장 점거 운동이었다. 2001년 디폴트 전후로 많은 공장이 도산했다. 일부 노동자들이 몇몇 도산 기업의 공장을 접수해 운영했다. 이 운동은 규모는 작았지만(아르헨티나 경제 규모의 0.7퍼센트), 자본가들의 관리 없이도 생산을 민주적으로 조직할 수 있음을 보여 줬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었다.

2001년 대중 반란은 신자유주의에 맞서 벌어진 전국적 대중 반란이었고, 무능한 자본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체제의 맹아를 훔쳐 보여 줬다. 아르헨티나 자본가 계급이 운동에 밀려 분열하자, 주류 언론들조차 “혁명 직전 상황”이라는 진단을 내놓았을 정도다.

그러나 이 운동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고리들이 부족했고, 그 때문에 운동이 보여 준 놀라운 잠재력을 다 살리지 못했다.

가장 아쉬운 부분은 자발적 대중 반란을 결집시킬 조직 노동자 투쟁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당시 아르헨티나 조직 노동자들은 경제 위기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데에 분노했지만, 파업 등 조직된 힘을 아래로부터 스스로 발휘할 만큼 자신감이 높지는 않았다.

그런데 파업을 조직해 이끌었어야

했던 노동조합 지도부는 노동계급과 ‘산업자본’ 간 계급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금융 위기의 대안이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자들의 운동 참여를 개별적 차원으로 제한했다.

조직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졌다면, 피케테로스 운동에 대한 지배자들의 공격을 무력화하고 공장점거 운동을 경제의 주요 부문들로 확대하는 것도 완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노동총(CGT) 지도부는 페론주의 정치인들로 구성된 임시정부를 지지했다. 이 때문에 페론주의 임시정부는 실업 급여 지급을 유예하는 식으로 피케테로스를 공격할 수 있었다.

아르헨티나 좌파들이 노동조합 지도부의 잘못된 방향에 도전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한 약점이었다. 좌파에 대한 대중적 관심은 높아졌지만, 극좌파들은 조직 간의 - 때로 물리력을 동반한 - 종파적 투쟁에 신경쓰느라 운동에 필요한 전망과 전술을 제시해야 할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피케테로스 내에서 급격히 세력을 키운 자율주의 정치 경향도 모든 정당을 거부하고 노동운동에 적대적이라는 정치적 약점 때문에 큰 한계가 있었다.

이런 상황 때문에 CGT의 보수적 지도부는 거의 도전받지 않았다. CGT보다 상대적으로 좌파적이었던 아르헨티나노동자연맹(CTA)의 지도부도 18개월의 대중 운동 끝에 등장한 페론주의자 네스토르 키르치네르를 우파에 맞선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고 지지하게 됐다.

그럼에도 2003년 4월 22퍼센트라는 유례없이 낮은 득표로 집권한 키르치네르 정부가 상황을 일거에 반란 이

전으로 ‘정상화’시킬 수는 없었다. 키르치네르는 IMF와 부채 상환 재협상을 벌일 수밖에 없었고, 민영화 과정도 몇 년 유보했다.

## 다시 찾아온 경제 위기, 노동자 투쟁이 성장하며 주목받는 좌파

네스토르 키르치네르와 그의 후임인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둘은 부부다)가 집권하던 기간에 아르헨티나 경제는 한때 연 8퍼센트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회복세로 돌아서는 듯했다. 이는 주로 2000년대 초반 중국 경제의 호황으로 원료 수출이 크게 늘어난 덕이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은 이에 맞춰 나아지지 않았다. 2007년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디폴트를 겪었던 2001년의 70퍼센트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기업 이윤의 연평균 증가는 2005년 77퍼센트를 기록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2008년 미국발 경제 위기가 터지면서, 겉으로는 번지르르했던 아르헨티나 경제가 휘청거리게 됐다. 노동자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해마다 30~40퍼센트나 오르는 물가 인상률에 견줘 임금 인상률은 턱없이 못 미쳤다. 구조조정 때문에 실업률은 계속 올라갔다.

키르치네르 정부는 노동자들을 공격해 위기를 돌파하려 했다. 공공시설에 대한 정부 투자를 삭감하고, 총액인 건비제를 도입하고, 임금 인상률을 물가 인상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한해 실질임금을 대폭 삭감했다. 이에 불만과 분노가 점차 고조돼, 키르치네르를 군건히 지지하던 CGT 지도부조차 정부의 긴축 정책에 반대하게 됐다.





사진 출처: Leonardo Martínez (플리커)

2015년 6월 3일 “단 한 명도 안 돼!”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위 참가자.

페론주의 여당에 대한 지지가 흔들리자, 2010년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는 선거법을 개정했다. 예비선거에서 2퍼센트 이상 득표하지 못한 정당은 국회의원 후보를 내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었다. 이 개정은 여러 정당으로 쪼개져 있던 우파 정당들이 여당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려던 것이었다.

이 개정으로 우파들뿐 아니라 주요 트로츠키주의 단체인 노동자당(PO), 사회주의를 향한 노동자당(PTS), 사회주의 좌파(IS)도 선거에서 존재감을 잃을 처지가 됐다. 그래서 이들은 선거연합 FIT를 꾸려 선거에 도전했고, 2013년 총선에서 1백만 표 이상을 얻으며 사상 최초로 국회의원까지 배출했다. [관련 기사: 본지 120호 ‘아르헨티나 혁명적 좌파들에게 찾아온 기회’]

FIT 자체는 선거제도 개혁의 부산물이었지만, 좌파들에게 절호의 기회를 열어 주기도 했다. FIT가 결성되자, 2013년 총선 때 사람들은 기성 정치에 대한 불만을 FIT 지지표로 표현했다. 일부 주에서는 FIT 지지율이 최대 14퍼센트까지 올라갔다. FIT 소속 트로츠키주의 단체들이 전투적으로 거리 행진을 벌이고 노동조합, 지역사회, 학생운동에서 활동을 늘린 것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극좌파들이 이렇게 주목받을 수 있었던 핵심적 동력은 20여 년 만에 조직 노동운동이 성장한 것이었다. 아르헨티나 노동자들은 2012년 이래로 긴축에 맞서 하루 총파업을 세 차례 벌였다. 페론주의 정부의 충실한 지지자였던 아르헨티나 노총(CGT)도 상대적 좌파 노총인 아르헨티나노동자연맹

(CTA) 등과 함께 파업 소령에 나섰다.

노동자들은 여러 부문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2013년 멕시코 교사들이 벌인 전투적 파업의 영향을 받은 아르헨티나 교사 노동조합은 2014년에 총력 파업을 벌여, 정부의 임금 인상을 제한을 뛰어넘는 31퍼센트 인상을 쟁취했다. 뒤이어 금속 노동자들도 정부의 제한을 초과하는 27.5퍼센트 임금 인상을 따냈다.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지하철 노동자들은 올해에만 두 차례 하루 파업을 벌이며 주1회 휴일을 따냈다(그 전까지는 주7일 근무제였다).

노동자 투쟁이 성장하면서 다른 부문 운동에도 활력이 돌고 있다. 그중 올해 6월 3일 벌어진 대규모 자발적 거리 시위 “단 한 명도 안 돼!”(스페인어 약칭으로 NUM)\*가 주목할 만한 사례였다. NUM은 여성에 대한 구타를 종식시키고자 하는 염원을 담은 기획됐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전역에서 수십만 명이 이 날 시위에 참가했고 이웃 나라인 우루과이와 칠레에서도 연대 시위가 벌어졌다. NUM은 2001년 반란이 끝난 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벌어진 시위 중 규모가 가장 컸다. (그리고 이 운동은 스페인 등 다른 스페인어권 나라들로 확산되고 있다.)

### 운동이 더 전진하려면 좌파의 구실이 중요하다

한편, 우파들도 선거연합 ‘변화를 위한 연합’으로 결집했다. 2014년 아르헨티나 정부가 외채 위기로 “기술적 · 부분적 디폴트”를 선언한 이후, 우파들은 위기의 책임을 정부 여당에 돌리면서 긴축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파들이 결집하자 정의당도 동요하고 있다.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에 대한 지지가 임기 초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자, 정의당에서 오른쪽으로 분화해 대선에 출마한 혁신전선(FR) 후보 세르히오 마사도 결선 투표에서 야당을 지지하고 있다. 여당 후보 시울리는 이런 기세에 놀려 우파들의 연금 삭감 정책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 때문에 결선 투표에서 우파가 득을 볼 듯하다. 그러나 이는 페론주의가 위기에 빠졌음을 보여 줄 뿐이지, 사회 전반이 우경화했다는 뜻은 아니다.

아르헨티나의 좌파들과 노동자 운동이 우파의 긴축 정책과 노동자 공격에 맞서려면 중요한 과제를 이뤄야 한다. FIT는 이름이 ‘좌파와 노동자 전선’이지만 투쟁하는 공동전선이라기보다는 세 트로츠키주의 단체 사이의 선거연합에 더 가깝다. FIT의 결성과 약진을 기회로 좌파들이 아르헨티나 정치 공간의 변두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도모할 만하지만, 아직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과거의 종파적 관성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은 듯하다.

아르헨티나 운동은 2001년 저항에 참여했던 활동가들에 기반을 둔 대중 운동을 건설하기에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 노동계급 투쟁이 성장해 활력을 되찾고 있는 지금, 좌파들이 능동적 · 개방적으로 활동해 긴축에 맞선 대중 저항을 건설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과정에서 페론주의에 효과적으로 도전할 급진적 대안을 건설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버마 총선

# 강한 변화 염원이 드러나다

이 글을 쓴 자일스 자이 웡파콘은 타이의 사회주의자로, 현재 영국 망명중이다. 망명 전 타이 출라롱콘대학교 교수였고, 타이 정치단체 ‘노동자 민주주의’의 주도적 활동가였다. 웡파콘은 타이 군부의 2006년 친왕정 쿠데타를 비판한 일 때문에 국왕모독죄로 기소돼 15년형을 받을 위험에 처했었다. 2009년 경찰의 추적을 피해 영국으로 망명했다. 웡파콘은 고된 망명 생활에도 타이를 비롯해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주화 운동과 노동자 투쟁을 굳건히 옹호하고 있다. 웡파콘은 2004년 ‘다함께’(현 노동자연대)가 주최하는 ‘전쟁과 변혁의 시대’에서 ‘오늘날의 사회운동과 NGO들’, ‘동남아의 계급투쟁’, ‘그람시와 시민사회’ 등을 주제로 연설했다. 2007년에는 ‘맑스코뮤날레’에서 ‘21세기 혁명과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 ] 안의 말은 〈노동자 연대〉편집팀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덧붙인 말이다.

11월 8일 버마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정당이 크게 승리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버마의 군부 통치가 곧 종식되고 민주주의가 찾아온 것은 아니다.

버마는 지난 반 세기 동안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군부는 여전히 상 · 하원 전체 의석의 4분의 1을 임명할 수 있고, 이 때문에 버마 정치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군 장교만 내무부 장관, 국방부장관, 국경관리부 장관에 임명될 수 있다. 군부는 개헌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자의적으로 ‘위기’ 상황에 개입할 권리가 있다.

버마 대통령은 후보 세 명 중 한 명이 당선된다. 한 명은 군부 추천 인사이고 나머지 둘은 각각 상 · 하원 추천 인사이다.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최다 득표자가 대통령이 되고 나머지 둘은 부통령이 된다.

### 제한

아웅산 수치는 대통령 출마 자격이 없다. 그가 출마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수치는 영국인과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외국인이면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아웅산 수치고 그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에 환상을 품어선 안 된다.

수치는 지난 몇 년 간 분명한 이슬람 혐오 입장을 견지해 왔다.

[지난 몇 년 동안 버마에서는] 불교 극단주의자들이 군부의 묵인 하에 무슬림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학살하고 있다. 그런데 아웅산 수치는 로힝야족의 곤경을 고의로 외면하고 있다.

로힝야족 수천 명이 보트를 타

고 이웃 나라로 탈출해 난민이 될 수밖에 없었다.

민주주의민족동맹과 ‘군부의 정당’인 통합단결발전당(USDP)은 모두 무슬림의 선거 출마를 제한했다. 로힝야족은 아니지만 무슬림인 사람은 버마 인구의 약 5퍼센트다. 이들은 유권자 등록을 할 때도 인종차별적 제약을 받는다.

수치는 신념이 담대하지만, 신자유주의 정치를 받아들인다.

1988년 군부독재에 맞선 항쟁이 승리할 뻔했는데, 당시 수치는 이 운동의 기세를 완전히 꺾어버렸다. 그 이래로 수치는 군부에 타협해 왔다.

최근 수치는 민주주의민족동맹이 총선에서 압승하더라도 군부를 포괄하는 “국민 통합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는 버마의 엄청난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또, 그동안 중앙정부를 상대로 내전을 벌이며 민족자결권을 요구해 온 수많은 소수민족들의 염원도 이를 수 없을 것이다. 수치는 지금까지 소수민족들의 정당한 염원을 공개적으로 옹호한 적이 없다.

이번 선거는 버마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적 열기를 불어넣었다.

투표율이 높았다.

민주주의민족동맹은 앞으로 사람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음으로써 지금 드러난 열기를 꺼뜨릴 수도 있고, 군부에 맞선 투쟁에 새로운 열정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

후자와 같은 일이 벌어지려면 아웅산 수치고 민주주의민족동맹으로부터 독립적인 정치조직이 필요할 것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2479호 / 번역 김준호



사진 출처: bdbbbuma (플리커)

2015년 3월 11일 버마 경찰의 학생 시위 강제 진압을 규탄하는 사회운동 활동가.

### 아르헨티나의 선거 제도

총선과 대선에서 본 선거 전에 후보를 내고자 하는 정당·선거연합의 지지를 묻는 예비선거(PASO)를 실시한다. 이 선거에서 1.5퍼센트를 득표하지 못한 정당·선거연합은 본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다. 대선의 경우 본 선거에서 최다 득표한 후보의 득표율이 45퍼센트 이상이거나 40퍼센트 이상이라도 2위와의 차이가 10퍼센트포인트 이상일 경우에만 1위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다. 그렇지 않으면 1위와 2위 사이에 결선 투표를 치러 과반 득표자가 당선된다. 입법부는 양원제다. 하원은 2백57명을 선출한다. 하원 임기는 4년이며 2년마다 총선을 치러 2분의 1씩 새로 뽑는다. 상원은 총 72명을 선출한다. 상원 임기는 6년이며 2년마다 총선을 치러 3분의 1씩 새로 뽑는다.

### 페론주의

아르헨티나 전 대통령 후안 페론에서 유래한 정치 경향. 1943년 민족주의 장교들의 쿠데타로 등장한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이었던 페론은, 노동계급에 사회·경제적 양보를 제공하는 대신 노동조합을 국가에 종속시켰다. 1946년 대선에 출마한 페론은 “사회 정의”를 표어로 내걸며 강한 민족주의(포퓰리즘) 정서를 표방했고, 파시스트를 포함한 국우에서 무장 게릴라 조직을 포함한 극좌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정치 세력들의 지지를 얻으며 집권했다. 이후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 페론주의는 분화했는데, 오늘날 페론주의는 노동자 운동의 발전 대신 계급 협조를 통해 임금 등 경제적 이득을 보장받는다는 민중주의적 개혁주의의 모양새를 띠고 있다.

### “단 한 명도 안 돼!” (Ni una menos) 운동

여성 대통령인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 집권 7년 동안 여성 1천8백 명 이상이 (대략 30시간마다 한 명 꼴) 가정 폭력, 파트너에 의한 폭력, 중오범죄 등으로 살해당했다. 그러나 국가는 예산 부족과 법안 미비를 핑계로 미온적인 대응만 보였다. 이에 여성단체, 노동조합, 정당, 가톨릭 교회 등이 주도해 ‘피해 여성이 한 명이라도 그 수가 적은 것이 아니다’는 뜻에서 트위터 해시태그 #NiUnaMenos로 시위를 호소했다. 2015년 6월 3일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만 20만 명이 시위를 벌였고, 같은 날 전국 도시 80곳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 홈플러스노동조합 김미리 가좌지부장과 정한석 금천지부장 인터뷰

# “고용 보장을 약속받을 때까지 싸울 겁니다”

조합원 대다수가 비정규직 여성인 홈플러스노동조합은 2013년에 결성해 3년간 투쟁하며 조직을 확대하고 여러 성과를 쌓아 왔다.

최근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노동자들은 MBK가 직접 나와 고용 안정을 약속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민주노총이 파업을 선언했던 9월 23일에 고용 보장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전 조합원 파업을 벌였다. 11월 14일에 2차 파업에 나선다.

홈플러스노조 김미리 가좌지부장과 정한석 금천지부장이 지난 3년간의 이야기를 생생히 들려 줬다.

### 2013년 노조 결성 이후

“최근 드라마 ‘송곳’을 보면 예전 우리와 너무 똑같아서 볼수록 화가 나요. 그럴 때마다 노동조합이 꼭 있어야 하고, 우리가 노조를 만든 것이 정말 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노조가 생기면서 0.5시간 계약제\*도 없어지고, 근로조건이 나아졌어요. 일하는 만큼은 연장근무수당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인천의 청라점처럼 아직 노조가 없는 점포에서는 연장근로수당, 유급 휴게 시간이 아직 그대로인 경우가 많아요.”(김미리 지부장)

“저는 재고 관리팀에서 상품 분류, 재고 조정, 폐기하는 일을 해요. 무거운 박스를 계속 들어 옮기기 때문에 완전 ‘노가다’예요. 일한 지 10년째 접어들면서 제 몸이 여기저기 고장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리를 다쳤을 때도 사측은 묵발 짚고 나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 홈플러스노조가 만들어지자 가입했어요.

지난해에는 파트장이 무전기에 대고 ‘야 이 새끼야하는 거예요. 노조는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28일동안 농성

하고 싸웠죠.

인력 충원도 요구했어요. 식품 가공팀의 일이 굉장히 빠서 병가자가 8명이나 있었는데, 사측은 인원은 채우지 않고 남은 노동자들을 닦달했어요. 그러던 사측이 우리가 투쟁하자 말로나마 노조와의 대화를 정례화하겠다고 했어요. 그 투쟁 이후에 금천점의 조합원 수가 40퍼센트가량 늘어나서, 지금 1백 명 정도 됩니다.

조합원이 꾸준히 느니까 관리자들도 ‘이게 노조구나’ 하고 깜짝 놀란 거죠. 이제는 관리자들이 조합원들에게 “연장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부탁해요. 노조 힘이 얼마나 커졌으면 그러겠어요?”(정한석 지부장)

### 2015년 매각, MBK에 맞선 투쟁

“임금 인상과 더불어 MBK가 확실하게 고용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며 싸우고 있어요. 조합원들도 3개월째 투쟁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그냥은 절대 접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분할 매각 위험도 느끼니까 어떻게든 [확실한] 약속이나 보장을 받아야 해요.

또, 사측은 당연히 줘야 할 최저임금을 주고, 거기에 더해 원래 주던 상여금을 열두 달에 나눠서 주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임금이 올랐다는 식으로 생색내는데, 실제 임금 총액은 몇 백 원 차이더라고요.



MBK가 책임져라 9월 23일 홈플러스노조 1차 파업 집회.

저는 가좌점이 개장했을 때부터 어페텔[의류 매장]에서 15년 정도 일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사측이 매출에 건줘 인원이 많으면서 인원을 줄이겠다고 압박하더라고요. 일이 줄어든 것도 아닌데 여기서 인원을 더 줄이면 정말 뺨뺨이를 돌아야 해요. 우리가 죽든지 말든지 인건비 줄이면 그만이라는 식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오후팀이 밤 11시나 12시까지 일했는데 이제는 오후팀을 밤 10시에 퇴근시키고, 마감 업무는 한 달에 한 두 번만 배치하겠다고 해요. 원래 오후팀 업무를 하면 택시비와 심야근수당을 받았는데 [근무조를 변경하면] 한 사람당 최소 6~7만원씩 임금이 깎여요.”(김미리 지부장)

“MBK는 인수 절차를 끝내고 나서, 각 점포에 매출을 늘리고 인건비를 줄이라고 압박을 넣고 있어요. 정규직들은 매출을 끌어올리려고 매일 보고서

를 작성하고 있어요. 노조가 없는 점포는 전 직원들을 상대로 ‘우리 점포 장보기 운동’도 벌이고 있다고 해요.

MBK가 이제 빨대를 쫓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각 위로금을 줬잖아요. 공짜로 준 것이 아닌 거죠. 중간조를 늘리고, 마감조 인원을 줄이는 것이 구조조정의 시발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비조합원이나 정규직 사이에서도 불만이 생기고 있어요.”(정한석 지부장)

### 힘을 느낀 파업

“9월 23일에 다같이 파업해 모인 것이 처음이었어요. 또 조합원들은 홈플러스노조만 알지 민주노총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민주노총이 파업할 때 함께하니, 조합원으로서 소속감, 자부심 같은 것이 생겨 더 좋았어요.”(김미리 지부장)

“1차 파업 때 1천2백여 명이 모였어

요. 전국적으로 조합원이 2천6백 명인데 거의 반수가 온 것이죠. 파업은 70퍼센트가 참가했어요. 파업하니까 MBK에 대한 불만이 표출할 수 있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악에 대해서도 좀더 알게 됐어요.

노동 개악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일반 해고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저는 노조 지부장을 하면서 계속 최하등급에 가까운 등급을 받았어요. [노동 개악이 되면] 까딱 잘못하면 관리자들에게 대들었다고 저평가 해서 내쫓을 수도 있는 거죠.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고 느껴요. 우리는 곧 있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도 참가해요.

노조에게 가장 중요한 건 단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노동조합은 단결하기 위해서도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정한석 지부장)

인터뷰·정리 소은화

## 학교비정규직

# 임금차별 해소하고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 시도 중단하라

윤필연

교육부총리 황우여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신속하게 밀어붙이더니 학교비정규직 밥값 차별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은 6개월이 되도록 지키지 않고 있다.

그나마 올해 많은 지역에서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나마 밥값을 받게 된 것은 노동자들이 파업·투쟁을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도 노동자들은 조직을 확대하고 투쟁하며 무기계약직 전환 시기를 1년으로 단축하고, 장기근무가산금을 쟁취하는 등 고용과 처우를 개선해 왔다.

그럼에도 임금 차별은 여전하다.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교직원

의 60퍼센트 수준이다. 명절 상여금 등 각종 수당 차별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내년도 차별개선 예산은 0원이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교육·노동 개혁”으로 공격을 강화하려 한다.

정부가 ‘쉬운 해고’ 지침을 추진하자 경북교육청은 이를 ‘선도’적으로 학교비정규직에 적용하겠다고 나섰다. 경북교육청은 기존 취업규칙을 없애고 새로 ‘교육실무직원 관리규정’을 만들었다. 여기에서 해고 기준을 ‘근무성적 평가 결과 3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로 구체화하고 상대평가를 강화했다. 노동자 간 경쟁을 부추기고 ‘저성과자 퇴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경북교육청은 새 관리규정을 내년

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면서, 심지어 노동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았다. 이것은 명백히 불법인데도 말이다.

경북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경북교육청이 이를 철저히 않을 시,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일 것을 결의하고 있다. 경북에서 이러한 시도가 관철되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경북지역 투쟁에 다른 지역의 노동자들도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박근혜의 “교육 개혁”(교육 예산 감축, 학교 통폐합 추진 등) 역시 학교비정규직의 고용과 처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정부가 교육재정을 삭감하자 지방교육청들은 ‘예산 부족’을 이유

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요구를 거부하고, 스포츠강사 등에 대한 해고도 자행하고 있다. 학교 통폐합은 지방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협하기도 한다.

그런데 일부 진보교육감들은 정부의 구조조정, 교육 재정 절감 등에 타협하거나 편승하는 부적절한 태도를 취해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인천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급식비초차 제대로 주지 않고, 내년에 문체부의 재정 지원 중단을 이유로 스포츠강사 1백14명 전원을 해고하겠다고 한다. 이에 맞서 인천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부터

농성·집회·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공격을 계속 추진하면서 진보교육감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 따라서 진보교육감들이 노동자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행동할 경우, 진보교육감을 비판하며 독립적으로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차별 해소, 교육·노동 개악 중단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국회 앞 농성에 이어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대거 참가하고 내년까지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에 맞서 본격적인 투쟁을 시작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